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6.5%로 아시아 금융 위기 이전인 1996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EPA_ 연합뉴스

기회와 위험 혼재하는 인도네시아

지난해 GDP 6.5% 성장... 15년래 최고
상호 보완적 한-인도네시아 경제, 협력 지속적 확대 전망
임금 상승·노동 불안 등 위험요인도 급부상

유 럽 재정 위기와 미국 경기 침체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고공비행을 계속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90년대 이래 최고 성장' (월스트리트저널), '투자 증가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996년 이래 최고' (블룸버그), '15년래 가장 빠른 성장' (BBC)....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이 2011년의 GDP 성장률이 6.5%로 아시아 금융 위기 직전인 1996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자 세계 주요 언론은 일제히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찬사와 함께 성장 비결을 조명하는 기사들을 쏟아 냈다.

견실한 국내 소비시장

인도네시아가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나 홀로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인구 2억4천만 명의 견실한 국내 소비시장이 첫 손에 꼽힌다. 인도네시아는 소비가 지난해 GDP의 55.5%를 차지하는 내수 시장 중심 경제다. 수출은 2



인도네시아 정부와 마찬가지로 민간 경제학자들도 인도네시아 경제가 올해 6% 대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데에 큰 이견이 없다. EPA_ 연합뉴스

투자순위도 9위에서 5위로 뛰어올랐다.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는 싱가포르로 51억2천300만 달러였고 일본(15억1천600만 달러), 미국(14억8천800만 달러), 네덜란드(13억5천500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계속되는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고속성장은 올해에도 계속될까? 경제전문가들의 대답은 대체로 “Yes!”다. 지난해에 거둔 15년 만의 최고 성장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8년 동안 한 해를 제외하곤 줄곧 5% 이상의 고성장을 이룩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많은 나라가 침체의 늪에 빠졌던 2009년에도 4.5% 성장했다. 일부에서는 이런 저력을 감안할 때 투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 장치나 인프라 등이 보강되면 투자릿 수 성장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서 성장 목표를 6.7%로

잡았으나 재무부는 최근 유럽 재정 위기와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을

들어 6.5~6.6%로 소폭 내렸고 중앙은행인 인도네시아은행

역시 6.3%로 조정했다.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선진국들의

수입 축소가 수출에 끼치는 악영향과 함께 인도네시아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세계의 공장’인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다. 중국에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수출하는 인도네시

아가 예상외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 경제학자들도 인도네시아 경제가 올해 6%대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다우존스가 조사한 전문가 11명의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6.48%였다.

지난해 고속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올해에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6%대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천36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3%에 불과하다. 국내 시장 중심의 경제구조가 유럽 재정 위기와 미국 경기 침체의 영향에서 인도네시아 경제를 지켜주는 방패가 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의 증가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인으로 가세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는 192억8천만 달러로 2010년보다 18.9% 증가했고 내국인 투자는 25.4% 늘어난 85억4천만 달러에 달했다. 풍부한 자원과 거대한 시장을 노린 외국 기업들이 석탄과 자동차산업 등에 대규모로 투자한 덕분이다.

한국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524건, 12억1천900만 달러를 투자했다. 투자액이 2010년에 비해 2.4배 늘어난 것으로

Indonesia

인도네시아는 지난 8년간 한 해를 제외하곤

국내총생산이 줄곧 5% 이상 성장했다.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인도네시아가 홀로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인구 2억4천만 명의 견실한

국내 소비시장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인도네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BBB-와 Baa3로 한 계단씩 높였다. 1997~98년 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낮췄던 것을 14년 만에 투자 적격 등급으로 높인 것이다. 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안전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국제 자본의 인도네시아 유입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는 상호보완적 경제 관계

풍부한 자원과 정치적 안정,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중산층의 소비지출 확대, 외국인 직접 투자의 꾸준한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의 견실한 선순환을 이어가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인도네시아의 고성장이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방대한 국토와 풍부한 천연자원, 값싼 노동력을 가진 인도네시아는 자본과 선진 기술로 무장한 한국과 상호보완적 경제 관계로 최근 수년간 협력이 급격히 확대돼 왔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한국 기업들이 자원과 노동력을 보고 인도네시아를 찾았다면 지금은 정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의 협력이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5대 투자국으로 부상

한 데에는 정부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으로 크게 향상된 양국 간 신뢰가 한몫 단단히 했음은 물론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해 야심 찬 경제 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한국에 주 파트너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양국 경제 협력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종합계획은 현재의 자원 의존 경제를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고부가가치 경제로 탈바꿈시켜 오는 2025년까지 1인당 GDP 1만5천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서자는 야심찬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

1만7천여 섬으로 이뤄진 국토를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주력 산업을 육성하려는 이 계획에는 총 4천45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사업의 주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한 것은 최소한 20년 이상 핵심 경제정책을 함께 추진할 동반자로 한국을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정의 저변에는 한국 정부와 경제에 대한 강한 신뢰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요즈음 한국과의 우호 관계 구축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이 자주 엿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9월30일 자카르타 주재 한국대사관(대사 김영선)이 개최한 개천절·국군의 날 만찬이다. 이 행사에는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대통령, 유습 갈라 전 부통령, 하타 라자사 경제조정장관, M.S. 히다얏 산업장관, 푸르노모 유스기안토로 국방장관, 마리 엘카 팡에스투 무역장관, 줄키프리 하산 산림장관 등 전·현직 최고위 관리가 대거 참석했다. 연례적인 행사가 성황을 이룬 자카르타 외교가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돈독한 우의와 신뢰를 과시한 자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반면 불과 2주일 뒤 자카르타를 방문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은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 관리들과 잡았던 약속이 일방적으로 줄줄이 취소당하는 모욕을 겪었다. 겐바 외무상이 부디오노 부통령과 조코 수안토 정치안보조정장관으로부터 바람을 맞은 데 대해 자카르타 포스트는 “일본이 최대 투자국이었던 몇 년 전만 해도 인도네시아 고위 관리가 일본 장관과의 만남을 빼먹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며 고위 관리들이 그 대신 중국과 한국 장관들을 만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 내 권력관계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의 저력을 감안할 때 투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 장치나 인프라 등이 보강되면 투자할 수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FP_ 연합뉴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3월 26~27일 핵 안보정상회의의 참석차 방한하면서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대동할 계획이다. 한-인니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인도네시아 경제 개발 종합계획 참여를 더욱 구체화하는 등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들 긴장시키는 검은 그림자

그러나 양국 관계에 순풍만 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했거나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들을 긴장시키는 검은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최저임금 인상을 노린 노동자들의 과격 시위와 여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인도네시아 정부의 무기력함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 기업 등 외국계 업체들이 밀집한 자카르타와 베카시, 탕그랑 등 서부 자바의 노동조합들이 도로 점거 등 과격 시위를 벌인 끝에 최저임금이 15% 이상 올랐다. 지난해 물가상승률(3.79%)의 4배도 넘는 것으로 외국계 업체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임금인상률은 3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 업체들은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법규정이 여러 차례 무시됐다는 사실을 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애초 서부 자바주 노사정위원회는 최저임금을 4.2%, 반텐주 노사정위원회는 1.3%를 각각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나 노조 측이 마음을 바꿔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고속도로 봉쇄 등 과격 시위에 나서자 주지사들이 냉큼 항복하고 만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경영자총협회가 주지사들의 최저임금 인상률 번복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행정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중앙정부가 노조의 위협에 굴복해 법원 판결마저 뒤집음으로써 기업들의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201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부와 정치권의 노동자 눈치 보기를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런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역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한국상공회의소 송창근 부회장(KMK 글로벌스포츠 회장)은 노동계의 최근 움직임은 대규모 폭동 사태가 일어난 1998년 이후 최악이라며 노동집약적 산업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 불안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가 점차 강화하고 있는 자국 산업 보호 육성정



방대한 국토와 풍부한 천연자원, 값싼 노동력을 가진 인도네시아와 자본 및 선진기술을 가진 한국경제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최근 수년간 협력이 급격히 확대돼 왔다. EPA_ 연합뉴스

책도 기업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월1일 보세구역 내 외국 봉제업체들의 하청을 금지하는 규정의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 기업들과 한국 대사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에 한해 연말까지 하청 금지를 유예받았으나 상당수 봉제업체의 타격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 자국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2014년부터 가공하지 않은 광물의 수출을 금지한다는 방침도 세워 놓고 있으며 가구용 목재 등으로 사용되는 등나무 수출은 이미 금지한 상태다.

인도네시아 노동계와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변화들은 단기간에 이익을 실현시키려는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요소였던 저임금과 세제 혜택 등의 매력이 사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인도네시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이제는 투자 전략을 단기적 이익 실현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사회 및 기업과 함께 발전하는 중장기적 이익 추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주영 자카르타 특파원 scitech@yna.co.kr